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선정 오리엔테이션 개최, 478명 참석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9월 16일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열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9월 13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9월 16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열렸다. 참석인은 478명으로 참석률이 공론화위가 예상한 70~75%보다 높은 95.6%였다.

시민참여단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대표 단체가 선정한 두 명의 전문가에게서 30분씩 강의를 들었다. 건설 찬성 측 전문가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반대 측 전문가로 홍중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홍 교수는 “2조원 가량의 신고리 5·6호기 매몰 비용이 아깝다는 주장이 있는데 완공하려면 추가로 7조60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 돈을 활용해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발전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정 교수는 “건설 중단 시 7조6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신고리 5·6호기가 60년간의 설계 수명 동안 184조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차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8월25일~9월9일) 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물었지만 이번에는 원전 등의 기본 지식을 묻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자료집과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공유하고, 10월 13일 같은 장소에 모여 2박3일 합숙 토론을 한다. 공론화위는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하고 10월 20일 시민참여단의 찬반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산업부, 24기 전 원전 대상 운영 전반 종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특별팀(TF)(단장: 박재호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을 계기로 한빛 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관부식 등 발견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빛4호기의 결함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동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 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 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17.10~12월)이며, 점검 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4, 고리2)에 대해 '18.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19.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 공개 규정을 개정하여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한다. 또한, 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전 안전 운영 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장관, 원전 안전 현장 점검 경주 방문, 지역 주민 간담회도 가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9월 12일 경주를 방문해 원전 안전 점검과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백 장관의 경주 방문은 원전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백 장관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주지역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는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진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백 장관은 원전 지역의 부담과 혜택 간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간담회 직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하고 주민 입장에서 안전성이 검증되



백윤규 산업부 장관이 9월 12일 경주시 내남면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방문하여,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부지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내진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 장관은 경주지역 현장 점검을 마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금년 내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재전망안 발표

2030년 목표 수요 100.5GW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는 9월 15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재전망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목표 수요는 100.5GW로 기준 수요(BAU) 113.4GW에서 수요 관리량 13.2GW를 차감한 후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요 증가 효과 약 0.3GW를 추가한 값으로 계산되었다.

100.5GW는 7차 계획의 2030년 수요보다 12.7GW가 작은 값으로, 9월 GDP 재전망(2.47%→2.43%)에 따라 0.4GW, 누진제 개편 효과 제외 0.6GW, 수요 관리 목표량 확대 0.4GW 등으로 금년 7월 수요계획 초안의 2030년 수요보다 약 1.4GW가 감소되었다.

〈8차 수급계획 전력수요 재전망 결과(GW)〉

구 분	'20년	'22년	'24년	'26년	'28년	'30년	'31년
7차	97.3	101.8	105.2	108.0	110.6	113.2	-
8차 초안 (7/13)	90.9	94.1	96.9	99.1	100.6	101.9	102.4
8차 재전망안 (9/15)	90.3	93.3	95.7	97.6	99.1	100.5	101.1